

4·11 총선 5대 이슈

2 야권연대

‘민주+진보=승리’ 쉽고도 어려운 문제

민주통합당(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당) 등 야권연대는 하나의 선거 공식이 됐다. ‘야권연대’는 곧 ‘총선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관심도는 단연 최고다.

연대 없는 총선은 곧 양당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해 총선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야권연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호남지역 의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선택이다. 호남지역 정세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발표된 광주일보 등 한국 지방신문협회 9개사가 발표한 야권연대 가능성 공동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5.35명이 야권연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연대는 바람직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한 응

답자는 29.1%였다. ‘연대가 바람직하고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4.4%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5%가 야권연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렸다. 이중 ‘야

수도권·영남권 전략적 연대 가능성 광주·전남 양보 지역구 어딜까 관심

권연대가 바람직하고 연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38.7%)·전남(33.8%)이었다.

30%대가 넘는 지역은 광주·전남 뿐이었다. 이는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여전한 속에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 민들의 정세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양당은 야권연대를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이 어느 지역구를 양보할 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자당의 지지

기반이 약한 영남권에서 진보당과 전략적 연대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호남지역 선거판도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진보당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당선 안정권이 호남권에 대한 양보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난 4·26 재보선 당시 순천처



광주상의 신년 인사회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정순남 전남도 정무부지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해 박주선·김재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경제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립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무공전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몰린 일부 지역구는 다른 야권 주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호남지역 의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야권연대를 바라는 지역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큰 반발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15일 새 지도부가 꾸려져 봐야 알겠지만, 야권연대는 수순 아니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말은 없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과 울산 등에서만 전략적으로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김정일 사후 北·中 국경 리포트 北 中 동북4성 전략하

남북 단절... 정치·경제 중국에 급속 종속

지난 27일 찾은 중국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은 김정일 사망 타인적 적막감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북한 신의주와 접해 있는 단둥은 그 덕분에 중국 내 유명관광지가 됐고, 북한 및 한국 사업체의 직원, 가족,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족과 한족들로 북적거리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취파랴’ 등 북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북한식당인 평양고려식당과 류경식당 등에서 웃음소리가 점도 밖에서 들릴 정도로 시끌벅적했지만 지난 19일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일순 고요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다만 분향소가 설치된 북한의 선양(瀋陽)영사관 단둥지부가 있는 류경식당 주변만은 AFP, AP 등 세계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 일본 NHK, 중국 CCTV, 한국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경쟁으로 북적거렸고 이들을 제지하는 중국 공안들과 간간히 승강기가 벌어지곤 했다. 거리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신기했는지, 차 유리문을 내려 공안들에게 사정을 묻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 덕분에 성장한 단둥시의 최고 관광상품인 중조우의교(中朝友好橋)와 압록강철교에는 추운 날씨에도 가까이에서 신의주를 보거나 압록강 유람선을 타려는 관광객들

신 압록대교 설치 한창 북경~평양 고속열차설 北 공산품 거의 중국산

이 매일 수백 명씩 찾고 있었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북한 쪽 교량만 파괴된 압록강간교를 한동안 공개하지 않았으나 언제부터가 성인 1인당 30 위안을 받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교 입구에는 6·25 당시 북한으로 진격하는 중국 인민군의 모습을 그린 부조가 설치돼 있고 화려한 LED 조명으로 꾸며졌다. 그 주변에서 중국 상인들은 화폐 개혁으로 종잇장보다도 가치가 없는 북한 구폐 묶음, 북한 담배, 조약한 수준의 북한 기념품을 팔고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입힌 뒤 신의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상인까지 생겨났다.

단둥은 북한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와 트럭, 버스 등이 하루 수백 번 왕래하는 중국-북한 전진기지다. 지난 19일 이후 일주일 간 생화나 장례용품 등을 실은 열차나 트럭이 몇 차례 오가는 수준이었으나 27일부터 서서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었다. 28일에는 쌀과 옥수수 등 식량을 가득 적재한 화물열차가 신의주로 향하기도 했다.

한국 업체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 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북한과 직접 업무교섭이 어렵게 되자 중국 업체가 가운데 끼어 중계하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중조우의교의 통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이곳에서 10여km 거리에 신압록대교를 설치해 이 대교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3대 세습체제를 견고히 구축하려는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과의 연대를 좀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실상 북한을 종속시키며 잇속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부터 단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52)씨는 “중국인이 북한을 동북 3성인 지린성, 헤이룽장성, 라오닝성 등에 이어 제4성으로 만들려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며 “이미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중국산으로, 중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철저한 자국 이익 행거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올 한해 바라건대~

“지구상에 20弗짜리 배추 어디 있나”

이명박 대통령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국정목표로 제시한 물가상승 억제와 관련,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實名)으로 관리하라는 것으로,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물가 인상을 3% 초반에서 묶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 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배추의 경우 농수산식품부의 A급 장, 삼푸는 지식경제부의 B과장과 같은 식으로 담당자를 정한 뒤 ‘실명제’란 용어 그대로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정 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다. 물가문제는 공직을 걸고 쟁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추가격이 1만5000~2만원이면, 달리로 하면 20달리인데 지구상에 20달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면서 “올 한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TA 파고를 넘어
농어업 선진화에 매진하겠습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lff.go.kr)를 참조하세요.

2012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 경쟁력의 필수 조건,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
 - 지원방식 변경(보조+융자→이자보전)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
- 사람이 가장 중요,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
 - 인삼, 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 육성
 -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 진입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농업인은 생산,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 농협·수협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품목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
 - '12년 RPC 비 매입자금의 25% 이상 수탁매입 의무화
 - 원예 농산물의 농협 계약재배를 20%까지 확대
 - 수산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 신규 지원

농어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15년까지 마을 단위 공동경영체 5천개 육성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
 - 소규모 고품질 농지를 단지화하여 공동경영 추진 등
- 직불제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농어의 소득지원 강화
 - 발농업직불제(ha당 40만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육지에서 50km 떨어진 도서내 어가) 신규 도입
 -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지급방식 및 지급단가 개선